



보도자료

담당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3775-9033)

보도 2024. 10. 21(월) 15:00부터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「정부 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」 세미나 개최

- “연금개혁안의 조속한 타결과 공적연금 제도내실화의 지속적 추진 필요”
- “퇴직연금, 2050년 전후 최대 연기금으로 도약과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”

○ 보험연구원은 정부 연금개혁안을 평가하고 공사연금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월 21일(월) 오후 2시 『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』 세미나를 개최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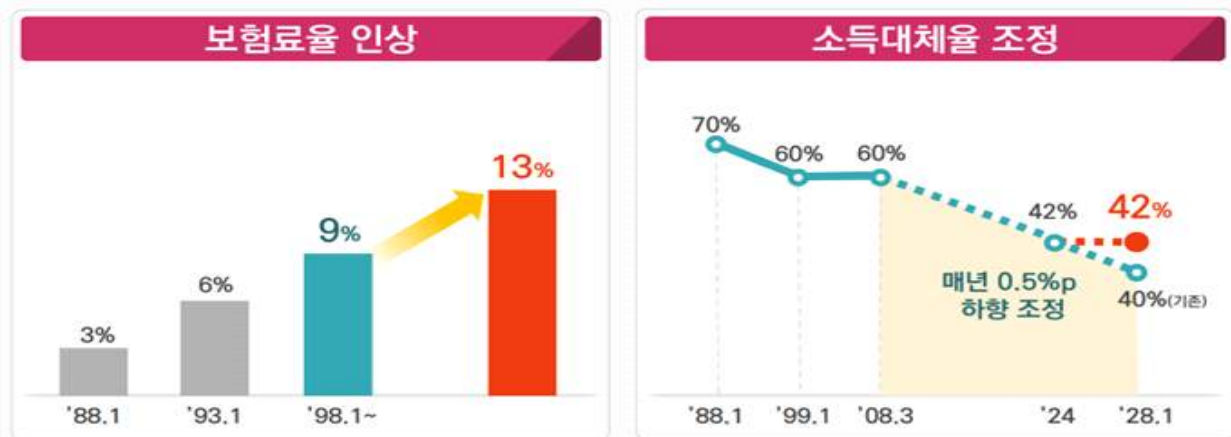
- 프로그램 -

시 간	내 용
14:00 ~ 14:20	(개 회 사) 안철경 (보험연구원 원장) (축 사) 한정림 (국민연금연구원 원장) (축 사) 이경희 (한국연금학회 회장)
14:20 ~ 15:35	(발 표 1)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 오건호 (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) (발 표 2)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 성혜영 (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) (발 표 3)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강성호 (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)
15:35 ~ 16:00	Break Time
16:00 ~ 17:30	(패널토론) 좌 장 : 성주호 (경희대학교 교수) 토 론 : 김부경 (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), 박정우 (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), 신승희 (국민연금연구원 실장), 이다미 (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), 임예진 (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), 정원석 (동아대학교 교수)

○ (주제발표 1)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‘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’라는 주제로 정부 연금개혁안의 취지와 한계를 정리하고 이후 개혁 방향을 제안함

- (국민연금 모수개혁)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%에서 13%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도입 이후 최초 보험료율 인상의 법개정으로 의미를 지니며,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1단계 인상안으로 적절함
 - 소득대체율 42%도 2007년 개혁의 단계적 하향은 인정하면서 현재 수준에서 멈추는 조정안으로, 기존 ‘인상 vs 유지’ 대립구도에서 적절한 방안임

<국민연금 모수개혁: 현 단계 적절한 조정안>



- (차등보험료율 적용) 청년층에 비해 중장년층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높여 세대 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은 긍정적임
 - 현재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등적보험료 인상은 연령대별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 - 다만 가입이력이 짧은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을 보완하는 보험료 감면 조치가 필요하고,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필요함
- (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)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 자동조정장치는 급여하락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일정 수준 재정안정화가 달성된 후 도입을 검토

할 필요가 있음

- 외국 공적연금은 현재 수지균형 구축한 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변화 폭이 적으나,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수지불균형 커서 재정안정화 개혁과 결합되면 급여 하락 폭이 클 수 있음

- (노후소득보장 강화)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 대해 인상되고, 향후 최저보장소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고, 퇴직연금 적용자는 확대될 필요가 있음

- 기초연금이 2026년에 40만 원이라면 인상액은 적으며, 이에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은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최종적으로 최저보장소득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

- 또한 퇴직연금 제도는 1년 미만 피용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함

- (주제발표 2)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“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”이라는 주제로 공적연금연금에 대한 자동조정장치 적용을 세대 간 공정의 관점에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함

- (세대 간 공정) 세대 간 공정은 최근 주요 국가들 연금 개혁의 화두임

-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각 국가들은 세대 간 연대의 개념을 확장해 연금액 지급방식을 변화시켜 옴

* 예) 독일의 경우 급여산식에 보험료율 변화와 제도부양비 변화를 반영함

-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수급자가 함께 분담하는 형태의 급여 자동조정장치는 선세대와 후세대 간 양보와 타협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최종적 결정과 적용은 국민적 합의의 토대에서만 가능함

- (세대 간 공정 추구하고 노후소득보장)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가운데, 비례연금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기간의 충분한 확보를 지원하여, 실질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방향이 타당함

- 크레딧 제도, 보험료 지원제도의 확대로 최소 3~5년의 가입기간이 보장된다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며 의무가입연령 상한의 조정도 가입기간 확대와 관련되어 소득보장 강화 방안의 하나임
- 기초연금은 현세대 노인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존속이 불가피하며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

○ (주제발표 3)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“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”이라는 주제로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,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함

- (공적연금 재정문제)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, 인구·경제구조의 변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임
 - 저출산,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고(2060년→2055년), 기초연금 재정부담('24년 24.4조 원)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
- (사적연금의 한계와 기대)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나,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됨
 - 사적연금은 가입률, 수익률,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,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,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기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
 - 그러나,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적립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역할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
- (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) 40년(25년) 가입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은 13.3%(8.3%)이며, 추가납부 고려 시 20%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됨
 - 현행 퇴직연금 보험료(8.3%)를 추가납부(16.0%)하여 40년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3.3%에서 25.6%로 증가함

*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40년 가입, 25년 수급하되, 투자수익률은 3%로 가정하여 추정함

- 한편, 투자수익률을 3.0%에서 6.0%로 제도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은 13.3%에서 25.3%로 증가함

• (제도개선 방안)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, 무엇보다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책과 전략 수립이 필요함

- (정책)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,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, 금융시장 Value up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함

- (전략)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,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,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

<연금전략 및 연금정책 방향 : 정리>

	가입·유지	자산운용	급여수급
전략	-잠재수요발굴, 홍보/교육 -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-장기가입시 수수료 인하	-수익률 제고(장기운용 등) -리스크관리 대응 강화	-연금수령 유도 및 다양성 -연금형태 수령 시 수수료 인하
정책	-퇴직연금 일원화(자동가입) -제도연속성 강화(중도해지제한, 퇴직연금 담보대출 활성화)	-금융시장 value up 환경 조성 -사업자간 건전 경쟁 유도	-퇴직: 자동연금화(Opt-out) -개인: 수령형태 다양화 (영국 소득인출형제 등)
	-세제혜택: 선진국수준의 세제지원 (공사연계연금 도입), 퇴직소득공제 축소->연금화 지원		
	-제도간 연계: 제도간 이해관계 조정(건보료), 실업수당,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고려하여 개혁 필요 -기타: 다층연금제도 컨트롤타워 구축		

•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